

# 충청남도 사회복지의 변화 및 과제

류진석(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서론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생계보장방식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새롭고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복지수요가 다양화되고 가족부양기능의 약화로 아동양육, 노인부양 등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지욕구나 지역사회문제는 지역 및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사회중심의 차별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화, 분권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더구나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구조의 질적 수준의 제고 등 안정되고 쾌적한 지역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충남의 사회복지수준으로는 이러한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 인구고령화 및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전, 저출산 추이의 지속 등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충남민선 5기의 도정철학을 기초로 충청남도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행복한 충남 실현을 지향하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충청남도의 미래모습을 담아낼 전략과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중 사회복지분야의 비전과 과제는 시민의 삶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사회복지분야의 비전과 과제는 종합적,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수요 및 지역사회복지 현황에 대한 진단과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의 여건과 변화를 살펴보고, 복지재정의 변화추이 및 지표에 나타난 충남 복지인프라의 수준을 중심으로 충남 사회복지의 특징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충남 사회복지분야의 과제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2. 충남 사회복지의 여건 변화 및 복지수요의 전망

최근 사회복지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양극화 및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 5일제의 시행 등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가정 폭력, 노인학대 등 예상하지 못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제공주체가 기존의 공공중심에서 민관이 협력하면서 다양화되는 추세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자원의 활용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지방정부의 복지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등 복지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충청남도도 이러한 여건과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의 현황 및 복지수요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사회복지대상자,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및 변화

첫째, 충청남도 사회복지대상자의 현황을 <표 1>에서 보면, 2010년 1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대상자는 전체인구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고려한 비율이다.

<표 1>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74천명, 의료급여대상자 79천명, 장애인복지대상자 122천명 등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계층, 즉 복지사각지대를 고려할 경우에는 실질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복지대상자의 수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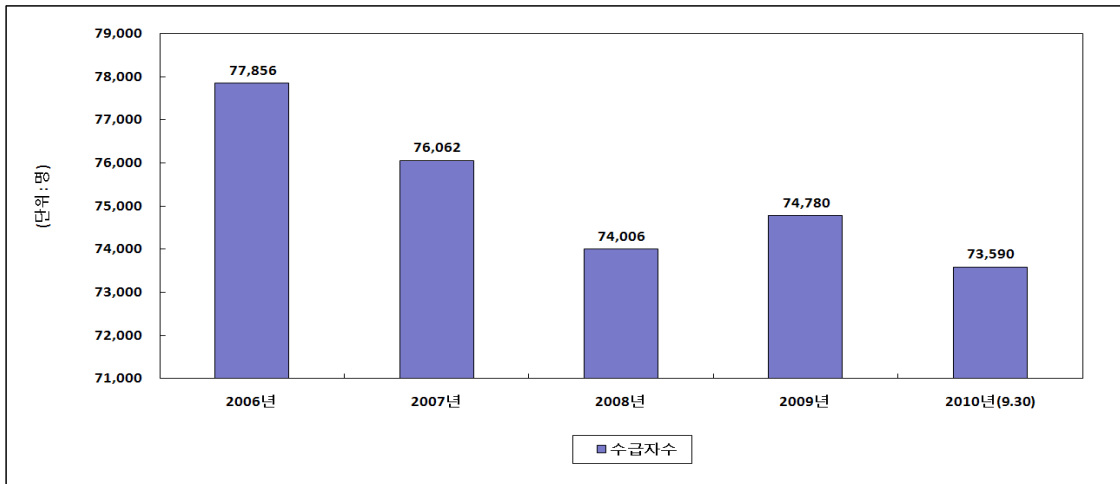
이 중에서 충청남도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록현황, 다문화 가정 현황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 2, 3>과 같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06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 반면에, 등록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사회통합과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제고라는 또 다른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사회변화라 할 수 있다.

<표 1>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2010. 1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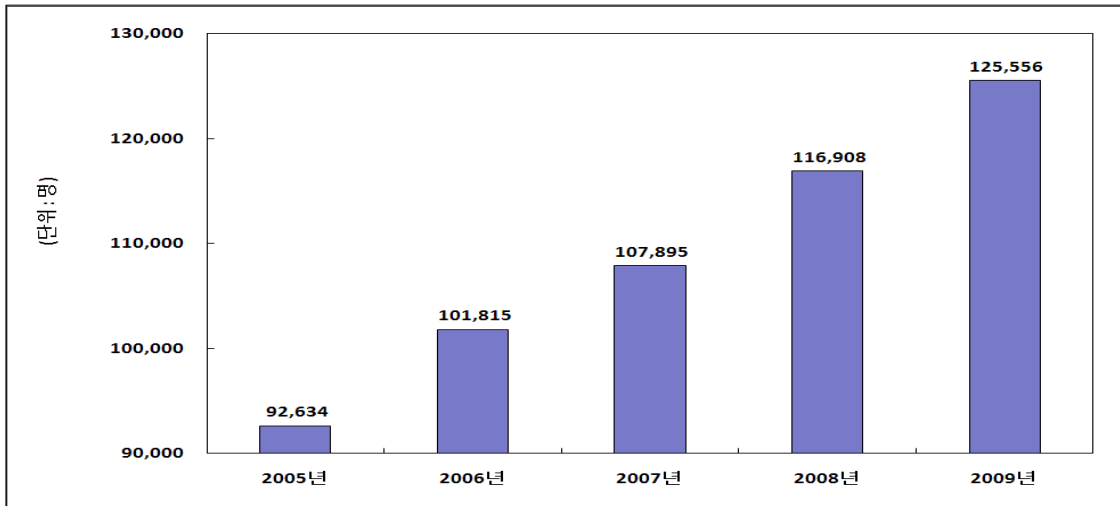
(단위: 명, 세대, 억원)

대상자	구 분			예산(억원)	비고
	계	수급자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74,555 (42,211세대)	74,555	-	2,302	
의료급여수급자	79,621 (50,278세대)	74,555	5,066	2,389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등
차상위	9,414 (4,685세대)	-	9,414	15	정부양곡
부랑인노숙인보호	172	148	24	7	노숙인
긴급복지대상자	3,785 (2,604세대)	1,975	1,810	39	수급자가 아닌 위기상황에 처한 자
아동복지대상자	39,982	20,088	19,894	250	아동급식, 전세자금지원자 등
정신질환 및 치매보호	9,347	1,997	7,350	147	투약비 월9-3만원지원, 물품비 월2만원지원
노인복지대상자	220,095	27,053	193,042	2,309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과건, 식사배달,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자 등
장애인복지대상자	122,696	21,862	100,834	673	세제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부부장애수당, 월동비,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의료재활, 난치병치료, 주택개조사업 재활보조기구 지원자 등
다문화가정	8,003	-	8,003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지원자 등
한부모가족대상자	13,332 (4,941세대)	6,015	7,317	31	월동비, 자녀학용품비, 양육비, 학비지원, 자녀수학여행비, 능력개발비 지원자 등
영유아보육대상자	57,544	2,899	54,645	1,243	만0-4세 차등보육,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동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보육료, 맞벌이가구보육료 지원자 등
위기가정희망프로젝트	704 (320세대)	-	704	0.8	수급자,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실직·휴폐업가구로서 급식비 등 지원자
계	복지대상자 483천명(도민의 23.7%), 복지예산 9,991억원(총예산의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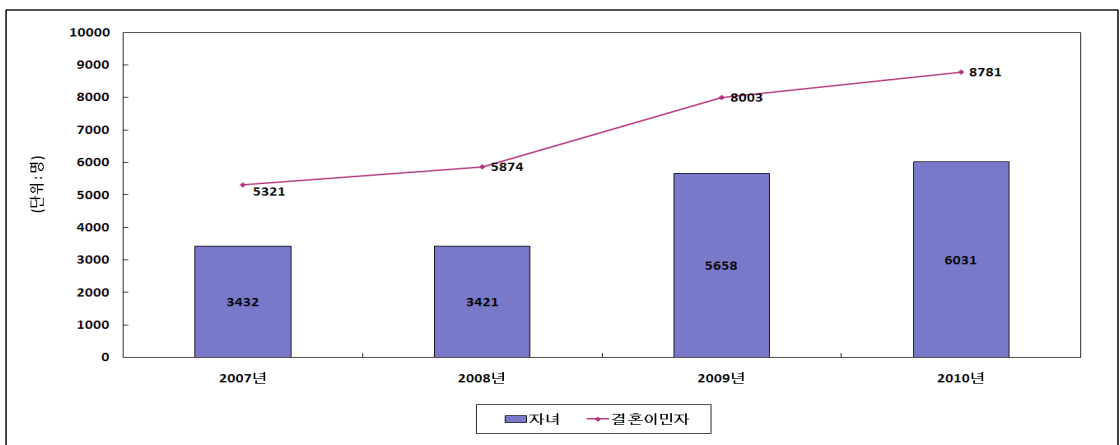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복지환경국 내부자료(2010).



<그림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



<그림 2> 장애인 등록 현황



<그림 3> 다문화 가정 현황

둘째, 민간자원 중 사회복지 관련시설을 사회복지대상자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이주민으로 구분하여 충남 및 16개 시.군별로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사회복지대상자별로 관련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청소년, 여성, 이주민 관련 복지시설은 양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며, 지역별 편차는 대상자별 분포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복지시설의 확충은 지역별 대상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표 2> 충남 사회복지관련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저소득층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 복지		이주민 관련 복지 시설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생활	이용	
충청남도		2			1	2							
천안시	1	6	5	667	4	10	11	47	5	3	2	10	4
공주시		5	16	424	6	10	0	7		3		4	2
보령시		4	12	359	3	9	3	1		2		1	1
아산시		7	22	504	2	7	3	31	2	1	1	5	2
서산시		4	11	389	4	7	3	13		2		3	1
논산시		4	9	485	2	3	3	20		1		2	1
계룡시		0	10	50			0	1		1	1	2	
금산군		2	10	304	1	4	4	12		1		1	1
연기군	1	4	6	323	2	3	2	7		3		1	1
부여군		3	14	456		3	1	3		2		0	1
서천군		2	14	296	2	3	0	13		1	1	1	1
청양군		2	13	291		3	0	3		1		2	1
홍성군		4	25	353		5	1	8		2		2	2
예산군		2	5	350		3	2	10		1		1	1
태안군		2	6	209		3	2	5		1		2	1
당진군		2	7	307		3	0	5		1		2	1
계	2	55	185	5,767	27	78	35	186	7	26	5	39	21

자료 :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내부자료(기준:2010년 8월 16일)

## 2) 복지수요의 전망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확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안정 기능 강화

충남의 2009년 현재 출생아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천명으로 전국 출생아수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 및 충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충남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충북 및 대전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약간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추이를 통해 향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3> 충남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 천명, %, 해당 시도 가임여성 1명당 명)

	출생아수				구성비		합계출산율	
	2008	2009	증감	증감률	2008	2009	2008	2009
전 국	465.9	444.8	-21.0	-4.5	100.0	100.0	1.19	1.15
대 전	14.9	13.9	-0.9	-6.3	3.2	3.1	1.22	1.16
충 북	14.1	13.9	-0.2	-1.1	3.0	3.1	1.32	1.32
충 남	19.7	19.3	-0.5	-2.5	4.2	4.3	1.44	1.41

자료: 통계청(2010). 2009년 출생통계 결과 보도자료.

한편,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은 충남의 중요한 현안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 4>에서 보면, 전국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현재 충남의 유년부양비(14세이하인구/15-64세이하인구)는 23.9%로 전국의 22.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15-64세이하인구)는 22.6%로 전국의 1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부양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고령화 지수(65세 이상인구/14세 이하인구)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충남은 94.6%로 전국의 67.7%에 비해 높은 편이며, 향후에도 고령화 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부양부담의 감소와 고령친화적인 지역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4> 충남의 연령별 인구현황, 부양비, 노령화지수 연도별 추이

구분	연도	연령별 인구현황						부양비(백명당)			노령화 지수 (백명당)
		0~14세 인구구성비		15~64세 인구구성비		65세이상 인구구성비		총부양비	유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명	%	명	%	명	%				
전국	2000	9,911,229	21.1	33,701,986	71.7	3,394,896	7.2	39.5	29.4	10.1	34.3
	2005	9,241,187	19.2	34,530,248	71.7	4,366,642	9.1	39.4	26.8	12.6	47.3
	2010	7,906,908	16.2	35,610,778	72.9	5,356,853	11.0	37.2	22.2	15.0	67.7
	2015	6,732,801	13.7	36,163,474	73.4	6,380,819	12.9	36.3	18.6	17.6	94.8
	2020	6,118,161	12.4	35,506,403	72.0	7,701,125	15.6	38.9	17.2	21.7	125.9
충남	2000	378,249	20.1	1,277,523	68.0	223,501	11.9	47.1	29.6	17.5	59.1
	2005	358,208	18.7	1,292,720	67.4	267,553	13.9	48.4	27.7	20.7	74.7
	2010	319,211	16.3	1,337,475	68.3	301,837	15.4	46.4	23.9	22.6	94.6
	2015	274,648	13.8	1,381,476	69.5	331,845	16.7	43.9	19.9	24.0	120.8
	2020	246,137	12.3	1,386,379	69.2	370,389	18.5	44.5	17.8	26.7	150.5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보장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10년 현재 충남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74천명으로 수급율은 3.7%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평균 수급율(3.2%)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보면, 전북 6.1%, 전남 5.8%, 충북 3.8%에 비해 약간 낮지만, 광역시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아동,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의 생활안정 기능의 강화와 이들 계층에 대한 공평한 기회의 보장과 사회참여의 확대, 기본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특히 아동빈곤의 문제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계층에 비해 추가생활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소득보장수준(예,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중 근로소득이 없는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심각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상 활동의 제약 및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 3. 충남 사회복지의 특징: 복지재정의 변화 추이 및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 1) 복지재정의 규모 및 변화추이

충청남도의 2010년도 기능별 복지예산(일반회계)은 760,129 백만원이며, 기능별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2007년 20.13%, 2008년 22.95%, 2009년 22.25%, 2010년 22.74%를 차지하였으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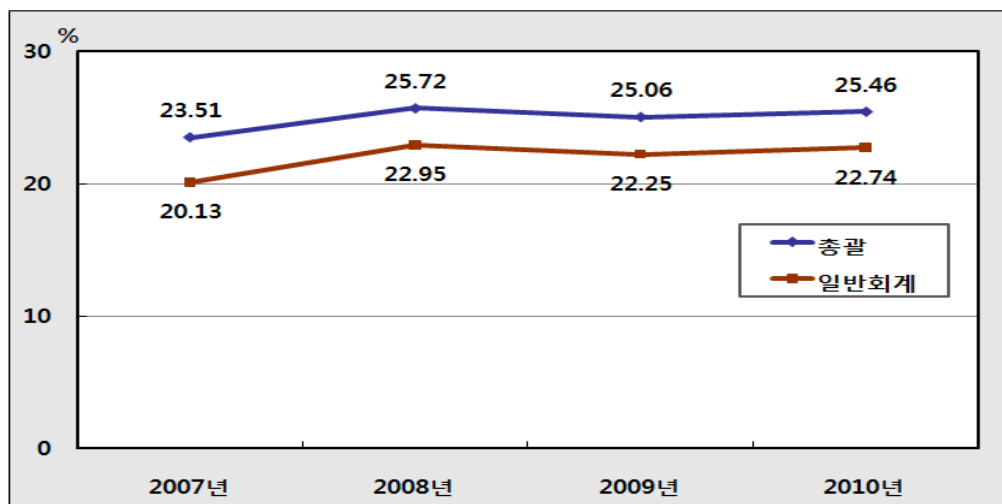
<표 5> 기능별 복지예산(일반회계) 년도별 추이 및 구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전체 예산		2,556,200	100	2,915,300	100	3,238,000	100	3,342,700	100
사회 복지	소계	514,581	20.13	669,030	22.95	720,304	22.25	760,129	22.74
	기초생활보장	237,510	9.29	235,006	8.06	254,760	7.87	260,239	7.79
	취약계층지원	74,504	2.91	74,500	2.56	83,581	2.58	92,239	2.76
	보육·가정 및 여성	85,756	3.35	111,200	3.81	131,947	4.07	139,032	4.16
	노인·청소년	83,034	3.25	214,168	7.35	220,128	6.80	235,973	7.06
	노동	6,830	0.27	4,481	0.15	4,612	0.14	6,853	0.21
	보훈	243	0.01	1,188	0.04	1,214	0.04	1,290	0.04
	주택	22,647	0.89	22,681	0.78	16,089	0.50	16,515	0.49
	사회복지일반	4,054	0.16	5,803	0.20	7,970	0.25	7,882	0.24
보건		49,849	1.95	55,967	1.92	55,276	1.71	64,168	1.92

자료: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cms/uadmin/uadmin03/02/1225373\\_1308.html](http://www.chungnam.net/cms/uadmin/uadmin03/02/1225373_1308.html)) 세입세출예산서

첫째, 복지분야의 예산을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그림 4>와 같이 2010년의 경우 총괄예산은 도 전체예산의 25.46%,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 전체예산의 22.74%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복지분야 예산의 변화추이



둘째, 2010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복지분야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초생활보장이 7.79%로 가장 높고, 노인·장애인 및 청소년이 7.06%, 보육 및 여성이 4.16%, 취약계층지원 2.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에 의료급여를 추가할 경우 비율은 더욱 높아지며, 총괄예산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의 비율이 12.72%는 이를 말해주고 있다. 기능별 예산 구성을 통해 복지분야의 예산 특징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선별적 복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재원유형별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의 재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 기금 및 분권교부세 등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중 법정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9.9%인 반면에,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10.1%수준에 불과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은 대부분 법정사업임을 알 수 있다.

<표 6> 사회복지분야별 2010년 사업예산(법정사업 및 자체사업 총괄)

(단위: 천원, %)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금, 분권
저소득	법정	495,927,729	402,876,761	46,445,713	46,605,255	0
	자체	399,520	0	107,904	291,616	0
노인	법정	241,517,188	184,428,298	14,888,862	42,172,028	0
	자체	19,267,160	0	4,365,440	14,901,720	0
장애인	법정	60,349,764	41,272,396	7,598,825	11,478,543	0
	자체	41,612,989	0	10,483,187	16,286,773	14,843,029
아동	법정	14,283,862	9,452,428	1,664,888	3,166,546	0
	자체	32,406,158	0	13,567,784	18,488,885	349,489
청소년	법정	8,928,080	5,000	690,612	4,043,828	4,188,640
	자체	546,000	0	326,000	220,000	0
여성	법정	2,925,094	1,812,984	564,001	548,109	0
	자체	42,400	0	42,400	0	0
보육	법정	179,065,142	89,559,011	28,605,844	60,900,287	0
	자체	19,555,116	0	4,969,663	14,585,453	0
다문화	법정	3,288,020	2,386,214	377,542	524,264	0
	자체	1,818,000	0	612,000	1,206,000	0
보건의료	법정	58,773,208	22,419,459	10,060,934	18,333,207	7,959,608
	자체	4,723,158	0	2,516,842	2,206,316	0
기타	법정	9,230,211	6,578,043	930,215	1,721,953	0
	자체	597,250	0	346,250	240,000	11,000
계	법정	1,074,288,298	760,790,594	111,827,436	189,494,020	12,148,248
	자체	120,967,751	0	37,337,470	157,655,194	15,203,518
	총계	1,195,256,049	760,790,594	149,164,906	347,149,214	27,351,766

자료: 충청남도 소관부서별 내부자료 재구성

특히 자체사업을 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분야의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자체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분권교부세에 따른 사업추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2005년도에 단행한 67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제도를 활용한 분권교부세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등이 중요한 분권교부세 수요별 대상사업이 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분류된 것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분권교부세 수요별 대상사업을 국고보조금적 성격을 지닌 사업으로 간주한다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은 법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재원유형별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구성비율을 <그림 5>에서 보면, 국비+도비+시군비 사업의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사회복지예산의 재원유형별 예산구성비율을 법정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국비 63.7%로 가장 높았고, 시·군비 21.6%, 도비 12.5%, 기금 및 분권교부세가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2/3 정도가 국비에 의해 충당되며 도비의 경우는 12.5%로 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업분야별로 보면, 저소득분야는 국비가 81.2%로 가장 많았고, 노인분야는 국비가 70.7%, 장애인 분야는 국비가 40.5%, 아동분야는 시군비가 46.4%, 청소년분야는 시군비가 45.0%, 여성분야는 국비가 61.1%, 보육분야는 국비가 45.1%, 다문화 분야는 국비가 46.7%, 보건의료분야는 국비가 35.3%, 기타 분야는 국비가 6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sup>1)</sup>



<그림 5> 사회복지분야 재원유형별 사업예산의 구성 비율(2010:법정사업+자체사업)

1) 충남의 복지재정 규모 및 추이는 류진석 외(2010)의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

## 2) 평가지표로 본 충남 복지인프라의 수준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평가결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자활영역,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충남 복지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단, 통계기준은 2009년말임).

첫째,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을 보면, <표 7>과 같다. 전국 평균은 103.8%인 반면에, 충남의 경우는 96.8%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 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 강원, 충북 등 다른 도에 비해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7> 전국 및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단위 : 명, %)

구분	요양시설 총 정원(A)	시설이용 대상(B)	노인요양시설 충족률(A/B)×100
전국	88,119	84,908.64	103.781
서울	7,892	14,972	53.313
부산	4,541	6,107	74.357
대구	2,892	3,877	74.594
인천	4,968	4,233	117.364
광주	2,210	1,985.77	111.292
대전	2,122	1,992	106.526
울산	1,431	1,172	122.099
경기	21,589	15,443	141.546
강원	5,080	3,478.872	146.024
충북	4,489	3,170	141.609
충남	4,668	4,821	96.826
전북	6,254	4,444	140.729
전남	5,128	5,502	93.202
경북	6,531	6,595	99.030
경남	6,109	6,049	100.992
제주	1,855	1,067	173.852

자료 : 김승권, 김연우. 전국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복지통계(2011)

둘째, 보육영역의 평가지표 중 보육시설 확충수를 보면, <표 8>과 같다. 보육시설 이용 전체 영유아수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용영유아의 비중을 보면, 충남의 경우 0.058%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충수도 전국평균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8> 전국 및 시·도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단위 : 개소, 명, 개, %)

구분	08년 국공 립보 육시 설수 (A)	09년 국공 립보 육시 설수 (B)	전체영유 아수(C)	보육시설 정원수 (D)	보육시설 이용전체 영유아수 (E)	국공립 보육시 설이용 영유아 수(F)	지자 채수 (N)	국공립보육시설확충수			
								B>A		(B2-B1=0)	
								(B-A) /N	①=( D/C)	②=(F /E)	계 ①+ ②
전국	1,826	1,914	2,736,807	1,482,225	1,174,907	129,629	232	0.379	0.542	0.110	0.652
서울	618	626	511,746	230,888	193,723	49,338	25	0.32	0.451	0.255	0.706
부산	136	136	153,636	78,238	62,862	9,779	16	0	0.509	0.156	0.665
대구	29	36	124,359	73,312	87,501	1,800	8	0.875	0.590	0.031	0.621
인천	76	84	152,192	71,246	58,567	5,132	10	0.8	0.468	0.088	0.556
광주	31	31	85,754	58,802	45,640	2,261	5	0	0.686	0.050	0.735
대전	29	29	87,897	47,864	38,141	1,524	5	0	0.545	0.040	0.585
울산	28	29	66,078	30,381	24,074	1,874	5	0.2	0.460	0.078	0.538
경기	386	420	725,746	359,498	283,774	27,231	31	1.097	0.495	0.096	0.591
강원	74	75	76,946	47,965	37,562	4,963	18	0.056	0.623	0.132	0.755
충북	42	43	84,846	56,254	42,557	3,111	12	0.083	0.663	0.073	0.736
충남	53	55	117,882	66,587	52,282	3,008	16	0.125	0.565	0.058	0.622
전북	42	45	96,787	72,755	55,619	2,456	14	0.214	0.752	0.044	0.796
전남	57	62	95,844	65,751	51,240	3,547	22	0.227	0.686	0.069	0.755
경북	103	109	134,724	85,131	63,724	4,992	23	0.261	0.632	0.078	0.710
경남	105	114	187,727	109,494	84,186	7,405	20	0.45	0.583	0.088	0.671
제주	17	20	34,643	28,059	23,455	1,208	2	1.5	0.810	0.052	0.861

자료 : 김승권, 김연우. 전국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복지통계(2011)

셋째,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남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은 0.431%로 전국 평균 0.51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전국 및 시·도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단위 : 명, %)

구분	등록장애인수(A)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정원수(B)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B/A)×100
전국	2,427,993	12,607	0.519
서울	402,039	2,963	0.737
부산	168,283	712	0.423
대구	113,412	589	0.519
인천	126,857	749	0.590
광주	65,929	407	0.617
대전	68,763	390	0.567
울산	47,150	349	0.740
경기	476,719	2,178	0.457
강원	97,494	740	0.759
충북	90,915	591	0.650
충남	125,481	541	0.431
전북	130,513	365	0.280
전남	144,067	317	0.220
경북	164,794	738	0.448
경남	174,907	698	0.399
제주	30,670	280	0.913

자료 : 김승권, 김연우. 전국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복지통계(2011)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실시한 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비교연구(2011)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79.87점을 획득하여 전국에서 4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어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그러나 장애인 복지 분야 5개 영역 평균 점수는 42.45점에 불과하여 전국 16위로 조사되어 교육과 달리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이 58.58점으로 6위를 기록하여 중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외에 복지행정 및 예산 55.68점(11위), 복지서비스 지원 37.31점(13위) 등으로 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 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과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각각 35.46점과 27.14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1).

<표 10>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2011)

장애인 교육수준 (순위)	장애인 복지수준 (순위)	장애인복지수준 세부영역(순위)				
		소득 및 경제활동지 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79.87(4)	42.45(16)	35.46(16)	27.14(16)	37.31(13)	58.58(6)	55.68(11)

넷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맞춤형)의 시행률을 <표 11>에서 보면, 강원, 경남, 울산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시도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역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독자적인 지역복지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표 11> 전국 및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단위 : 건, 개, %)

구분	투자사업 시행건수(A)	시군구수(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A/B)×100
전국	573	219	261.644
서울	55	25	220.000
부산	86	16	537.500
대구	14	8	175.000
인천	22	8	275.000
광주	38	5	760.000
대전	46	5	920.000
울산	8	5	160.000
경기	95	31	306.452
강원	23	16	143.750
충북	29	12	241.667
충남	27	16	168.750
전북	33	14	235.714
전남	33	18	183.333
경북	31	18	172.222
경남	25	20	125.000
제주	8	2	400.000

자료 : 김승권, 김연우. 전국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복지통계(2011)

다섯째,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을 <표 12>에서 보면, 충남의 경우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자활사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2> 전국 및 시·도별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 명, %)

구분	계(A)(①+②+③)	수급자중 취업 및 창업자수(①)	특례상향이 동자(②)	기타소득 기준 초과자(③)	자활사업참 여수급자(B)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전국	2,446	774	1,096	576	33,271	7.352
서울	298	95	114	59	4,067	7.327
부산	486	97	302	87	4,190	11.599
대구	99	31	33	35	1,423	6.957
인천	229	81	84	64	3,817	5.990
광주	123	42	57	24	1,793	6.860
대전	89	55	23	11	514	17.315
울산	39	13	20	6	362	10.773
경기	267	82	75	110	5,992	4.456
강원	66	26	30	10	2,619	2.520
충북	46	25	10	11	698	6.590
충남	151	41	93	17	738	20.461
전북	128	37	65	26	1,852	6.911
전남	120	42	42	36	1,831	6.554
경북	112	26	46	40	1,439	7.783
경남	123	35	60	28	1,454	8.459
제주	70	46	12	12	482	14.523

자료 : 김승권, 김연우. 전국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복지통계(2011)

#### 4. 충남 사회복지의 과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내실화하고, 복지수요에 따른 욕구별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지역복지공동체를 위한 서비스 연계체제 확립을 통해 충남복지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분야별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강화

새로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응하는 선제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영역별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생애 주기별, 위험의 종류별로 개별화된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예상되는 복지수요는 과거의 기본생활보장 중심의 생계지원방식보다는 개별

화되고 다양한 욕구중심의 서비스 수준으로 전개될 것이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의 안전, 장애인 재활체육, 여성 및 아동폭력의 예방, 여성의 경력단절, 다문화 가정의 사회참여 등의 문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또한 현재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비해, 복지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복지재정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별, 위험별로 생활체감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충남의 장애인복지수준이 전국 시도와 비교하여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2) 지역사회서비스의 내실화 및 주거복지의 강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이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발굴, 기획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하여 선정·지원·평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복지공급능력이나 지자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사업의 신청 및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중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지역복지의 역량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발전수준이 미흡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이 활성화되지 않은 관계로 수요자의 욕구충족을 위한 제도적 기회조차 제한되고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구매력이 크게 부족하거나 서비스의 질 문제 때문에 일반계층도 서비스 구매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질 좋은 지역사회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복지수요의 증대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투자 등으로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잠재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사회적 기업 육성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은 삶의 질의 중요한 지표이며, 체감도가 높은 기본적인 복지욕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주거공간은 매우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주거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삶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졌으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복지수요자의 주거환경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사업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왔다(예: 기존 자활사업에서의 집수리사업, 장애인복지에서의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등). 주거환경권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의 경우 대상가구 및 서비스 제공범위의 제한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예, 2010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대상가구는 123가구로서, 시군별로 보면 대상가구가 극히 일부가구에 불과함). 따라서 장애인, 독거

노인, 저소득층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3) 사회변화에 능동적인 복지기반 조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기반 조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복지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전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 상승, 자녀 출산 기피 등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하며 자녀의 양육부담, 사교육비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세대는 소득과 건강상태의 불안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노인부양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책효과 역시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영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임시술비용지원제도의 도입 등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노후에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어른 공경과 효 문화를 확산하여 노인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노인요양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제반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 복지기반조성과 나눔·상생의 복지공동체 실현

새로운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지역복지재정의 부담과 비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해 민·관협치의 복지협력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기능수행을 위한 복지거버넌스체계의 구축과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맞는 연구 및 조정 기능을 총괄하는 허브기능 수행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민간참여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과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는 복지재단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양극화의 진전, 개인주의 및 물질주의의 가치 중시로 인하여 경쟁 및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결속력의 강화 및 사회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나눔과 기부문화의 확산은 공존과 상생의 기초로서, 사회연대감 형성에 필수적이다. 또한 지방복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자원의 활용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인, 단체 등 민간영역에서의 나눔과 기부의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는 지역복지의 총량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지



역의 사회적 약자를 지역에서 스스로 돕는다'라는 기조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승권, 김연우(2011). 전국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복지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진석 외(2010). 충청남도 사회복지분야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2010). 도정지표  
충청남도(2010). 사회복지대상자 현황(내부자료).  
통계청(2006). 장애인구추계.  
통계청(2010). 2009년 출생통계 결과 보도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11). 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